
 금융위원회	보도 반 박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3.23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(02-2100-2630)		담 당 자	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42)

제 목 :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시행시기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.
(매일경제 3.2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①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시행일은 금년 9월입니다.

-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업권의 부담을 감안하여 법 시행 6개월 전임에도 관련 규정을 미리 제정했습니다.
-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「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」(금감원 행정지도)의 주요사항을 규정하였고,
-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금융권 협회가 금년 상반기까지 “표준내부통제기준”(best practice)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나갈 것임을 연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.

② 청약철회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회사가 금소법 취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.

-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수신하는 사람은 누구로 정할지, 문자 발신인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.
- 향후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.